

조국혁신당, 오늘 당무위 열어 새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논의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 후 당 진로 주요 안건 상정
현 지도부 임기 단축·내년 지방선거 전략 등 구체화

조국혁신당은 오는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복권 이후의 당 진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백선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조 전 대표의 행보는 내일 당무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무위에서는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절차가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내년 7월까지인 현 지도부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결의와 최고위원회 의결, 당무위 인준, 전 당원 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무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현 지도부 임기 단축에 대해) 우선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봐야 할 것 같다”며 “당무위, 최고위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양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다시 개혁의 꽃대를 굳게 잡으라는 시대의 명확한 요구”라며 “조국혁신당 2.0 시대를 열고 민주 진보 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과 공동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통과

를 전제로 조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재심 청구를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본회의 통과와 아니지만 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 일종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도 “저희가 추진하는 법에 따라 조국 대표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도 재심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며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후 당원·지지자들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검찰을 비롯한 정부의 개혁 과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 더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원·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당론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반헌법행위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 (전) 대표가 더 잘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새로운 사회 비전에 대해 더 큰 말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출소 후) 성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충분히 하고 검찰개혁 입법 과정 등에 본인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상임고문단 “여당은 당원 아닌 국민 받아들여야”

원로 정치인들 쓴소리…“전광석화식 개혁 공감하지만 정치 복원 필요”

“집권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정세균 전 국회의장). “모든 걸 전광석화처럼 해버려야 결과가 나오지만 과유불급이다.”(문희상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이 정청래 대표를 앞에 두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에서다. 간담회에는 김원기·임재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상임고문단은 대체로 정 대표가 주장하는 ‘전광석화식’ 강한 개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원만한 당정 관계와 정치 과정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윤석열 정부 파벌 근저에는 정치 실종이 있었다”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

성된 것이 아니라서 집권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이 아닌 국민 여러분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을 것인가의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핵심 지지층이 지지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몰아쳐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내란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 처리하겠다는 대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다. 의욕이 앞서 결과를 내는 게 지리멸렬한 것보다는 훨씬 나으나, 지나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문 전 의장은 또한 “대통령은 ‘통합’에 방점을 찍었는데 당이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이는 건 틀린 말

이 아니지만 지금 새 정치를 모색하는 길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전체 흐름을 볼 때 정치 자체가 멸실·붕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재정 전 의장은 “내란의 뿌리를 끊어야겠다는 정 대표의 발언이 때로는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에서는 올바른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과격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지적한 뒤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다원화, 재정지원, 노동정책들을 선진 국가들이 채택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민주당 정부가 아니면 해결 못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간담회 말미에 고문단의 발언을 각각 요약한 뒤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정치검찰 피해 회복” vs “국민임명식 불참”

광복절 사면 놓고 여야 엇갈린 반응…국힘·개혁신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사면이 ‘정치 검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사면 결정 이후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로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고, 당내에서도 환영 메시지가 이어졌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미칠 정치적 영향도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전반적으로 여론은 나쁘지 않다”며 “사면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전 대표와 함께 논란이 된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서도 “너무 과대 포장해서 악마화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광복절 특사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존중과 명예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선 이번 사면이 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미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이준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으로 청년층 민심이 이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정성 이슈와 맞물린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새 정부 국정 동력 확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임명식이 80주년 광복절 취지에 맞지 않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특별사면, 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괄 처리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포함된 데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전하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국민임명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기준 정부안 불변”

“당정 조율 더 지켜보겠다”

대통령실은 12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놔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여당의 기류를 따라 ‘50억 기준’ 주장에 힘 실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이 이런 관측에 선을 그은 셈이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10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사기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	--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화재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
보험사기행위대응지원센터